



技術人力 訓練 지원

정부는 이번 稅制改革에서 不況期의 投資에 대한 稅額控除制 新設과 企業技術 人力開發의 支援이나 企業貯蓄의 提高·中小企業의 育成 企業의 公開度深化促進 등을 위한 企業稅制改善에 큰 關心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稅制를 통한 企業에의 支援 내지 指導育成이 國民生活의 均衡成長을 위한 個人納稅者 保護育成 못지 않게 주요한 意味를 갖는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技術人力開發지원을 위해 이번 稅制改革에서 社內 技術訓練이나 職業訓練法人(假稱)의 技術施設에 대한 物品稅 및 關稅를 免稅로 托할 방침이다. 물론 附加價値稅制가 실시되면 物品稅가 없어지게 되므로 別途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職業訓練法人이 생기면 이들 法人에 대해서는 法人所得稅도 免除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支援施策으로는 미흡하다는게 企業側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技術人力開發을 위해 職業訓練法으로 5백명 이상(77년부터 2백명 이상)을 雇備하고 있는 企業은 의무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技術訓練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企業所得의 10%까지 技術開發準備金으로 損費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이 損失을 보거나 比價가 떨어지면 실제론 技術開發을 위한 損費인정을 못받는 형편이다.

이에 技術開發準備金制度의 實効性을 위해선 所得金額 아닌 外形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改善되는 企業稅制

李

△韓國經營研究所▽

東

洙

技術訓練 비용도 그렇다. 技術訓練 비용은 현재 準備金 아닌 開發費 명목으로 3年間 均等償却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企業會計原則에 따르면 開發費는 移延資産으로 當該年度에 損費 처리토록 되어있어 현실로는 相馳된다.

이런 것도 이번 기획에 是正되어야 할 것 같다.

나아가서 技術開發지원을 위해서는 增加試驗研究費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적극적인 시책도 바람직하다.

技術革新을 위해 直前事業年度보다 증가된 試驗研究費를 支給한 경우 그 증가된 試驗研究費의 一定率을 該當事業年度의 算出所得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해주는 方法으로 특히 不足資源의 開發技術이나 輸入資源의 國產代替技術 등의 革新을 위한 試驗研究費의 增額에 대해서는 重點의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企業貯蓄의 提高를 위해 이번 稅制改革에선 현재 法人留保額의 50%만을 課標로 인정, 持株比率에 따라 나눠 綜合所得課稅하고 있는 것을 課標인정 留保額比率을 조정 紙上配當稅를 緩和하겠다는 것이다.

企業貯蓄의 提高

또 準備金도 현재 海外投資損失準備金, 海外市場開拓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등 輸出과 관련되어서만 制度化되어 있던 것을 特別修繕準備金,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이나 이밖에 명목을 알 수 없는 각 방면의 準備金에 이르기까지 擴大하겠다는 것인데 아울러 資源開發投資損失 準備金이나 특히 公害防止施設 準備金の 制度化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換率變動에 따른 差損처리에 있어 일정한 기간동안 묶어 一括 처리함으로써 評價差損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換率變動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早期損金處理할 수 있도록 外貨表示 負債의 評價方法을 改善키로 했다.

이와함께 業界는 지금까지 事業年度初와 末에 換率에 의한 評價로 생긴 負債額(원貨)에 대해 實際償還金額에 해당하는 差損만을 損金處理가 인정되어 있는데 이는 償還이 안됐더라도 差損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 것이므로 差損全額을 損費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企業의 資金再評價積立金이나 移越剩餘金の 資本轉入에 의한 無償배당은 이를 적극 抑制할 방침이다.

즉 株主에 대한 無償株 배정은 현재 總發行株式數의 3%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少額株主에 대해서만 配當의 10%를 源泉徵收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稅率을 上向調整 함으로써 無償株 배당을 抑制하고 配當壓力도 완화해서 企業의 自己資本充實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無償株배당억제 시책은 企業公開誘導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정부가 企業公開를 거의 強制하다시피 하고있는 마당에서 어떤 기업들은 企業公開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마다 資産再評價를 실시, 過多하게 再評價積立金을 資本轉入시켜 놓고는 公開企業의 경우 資本市場 有成法에 따라 公開株式에 대해 年 15% 이상 配當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걸어 公開를 미루는 事例가 있어 온 터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도 이같은 回避戰術에 策기를 박자는 의도가 다분히 介在되어 있는 것 같다.

中小企業 대책

또한 정부는 이번 稅制改革에서 中小企業 육성을 위해 中小企業의 近代化 및 大型화를 위한 中小企業 施設改替準備 金制度를 新設한다.

中小企業의 純利益 중에서 施設改替에 드는 비용은 課稅所得에도 控除해 주겠다는 것이

다.

현재 30%로 되어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償却率도 引上하는 한편으로 中小企業이 統合하여 法人을 설립할 경우는 登錄稅와 取得稅를 免除해 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조치는 中小企業의 系列化를 유도해서 産業施設을 合理化하고 國內外的인 競爭力을 높여주겠다는 정책적인 의도라 하겠다.

이밖에도 정부는 企業公開促進의 意志와 함

우리나라의 租稅負擔率

年度		單位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區分	(1) GNP	稅	10,325	12,700	15,980	20,815	25,898	31,516	38,600	49,287	67,791	90,518
		稅	1,113	1,533	2,301	3,136	3,980	4,929	5,229	6,535	10,210	15,253
		增加率	—	37.8	50.0	36.3	26.9	23.8	6.1	25.0	56.2	49.4
		負擔率	10.8	12.1	14.4	15.1	15.4	15.6	13.5	13.3	15.1	16.9
		內國稅	700	1,038	1,564	2,181	2,838	3,555	3,743	4,391	7,180	10,121
		增加率	—	48.3	50.7	39.5	30.1	25.3	5.3	17.3	63.5	40.9
		負擔率	6.8	8.2	9.8	10.5	11.0	11.3	9.7	8.9	10.6	11.2
		關稅	176	254	379	447	509	522	591	824	1,260	1,734
		專賣益金	75	100	164	242	301	454	429	570	690	1,355
		地方稅	162	141	194	266	332	398	466	750	1,080	1,450
		防衛稅	—	—	—	—	—	—	—	—	—	597

게 實質的인 公開 유도에도 積極性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앞으로 같은 公開企業이라도 公開度에 따라 稅制上的 혜택에 差等을 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株式을 公開해서 大株主持株率 51% 이하의 公開要件을 갖춘 公開法人에 대해서는 所得규모에 따라 최고 27%의 法人稅率을 적용하고 非公開法人에 대해서는 40%까지의 差等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公開法人이라도 公開持株率에 따라 差等稅率을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大株主持株率이 51% 이하에서 0%에 이르기까지를 단계별로 나눠 法人稅率도 法人소득 5백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20%에서부터 40% 사이에서 調整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企業公開는 물론 公開度 深化 추진을 위해 公開度에 따른 差等稅率은 運用하되 公開法人 要件은 現行대로 둘 방침이다. 이는 公開法人이 自發的으로 公開度를 확대해야지 強制로 이행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企業公開에 대해서도 強制性은 항상 뒤에 留保시켰던 정부의 당초 방침과도 一致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기하자 6.25 분쇄하자 남침야욕